2일 Market Index
코스피 5859.08 (+128.34)
코스닥 734.36 (+9.98)
금리(국고채 3년) 3.740 (+0.025)
환율(원·달러) 1343.8 (+9.5)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시행 7개월, 현장엔 교섭 온도차 여전

노란봉투법 7개월

❶ 교섭 시점 제각각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교섭이 사업장마다 다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노사 교섭현장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과 고용안정을 위한 합의가 나온 반면, 교섭을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에 처음 마주 앉은 곳도 있다. 원청과 교섭할 길은 열렸지만, 교섭 개시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사업장별로 진척에 차이가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을 되돌아보며 달라진 일터와 향후 과제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국민 아버지' 최불암 영면 영원한 '수사반장'이자 '국민 아버지'로 사랑받은 배우 고(故) 최불암(본명 최영한)씨가 영면에 들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이 유족과 동료 배우들, 성당 신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장례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10일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한 법이다. 파업 등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고, 하청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하청업체와 협상해도 원청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에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서 교섭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 기준 하청 업장은 총 460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2곳이 교섭이나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81곳은 첫 만남을 포함한 본교섭 절차를, 61곳은 논의할 내용과 일정 등을 정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합의 사례로는 지난 9월 단체협약을 맺은 현대제철과 한강이앤피 등이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을 모두 원청의 교섭 거부 사례로 볼 수는 없다. 같은 기준일에 238곳은 노조의 교섭 요구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대형 건설사와의 우선 교섭이나 공공부문의 대정부 협의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절차를 미룬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 건수와 함께 교섭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살펴야 하는 이유다.

실제 합의에 도달한 대표 사례는 현대제철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9월10일 현대아이티씨(ITC·당진)·현대아이이씨(IEC·순천)·현대아이엠씨(IMC·포항)·현대아이에스씨(ISC·인천) 등 4개 자회사 노사와 근로조건에 관한 약속을 담은 단체협약을 맺었다. 노동부는 이를 개정법 시행 이후 첫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로 발표했다.

교섭에서는 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의 교섭 책임을 인정한 산업안전 문제가 다뤄졌다. 지난 8월20일 첫 만남 이후 네 차례 열린 교섭에는 현대제철뿐 아니라 자회사 측도 참여했다. 노사는 자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중장기 개선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섭요구 받은 사업장 460곳
142곳 교섭·실무협의 시작
현대제철 등 4곳 합의사례
238곳은 후속절차 미진행

〈6면에 계속〉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글로벌 에너지경쟁 우위 확보 해법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충, 발전원 다변화 등이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부터 차세대 에너지 기술 확보, 공급망 고도화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찾고,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과제를 진단하고 전후방 산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을 개최합니다. 정부와 산업계, 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명 :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 2026년 11월 10일(화) 14:00~17:00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
◆후 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metro

"소수의 성장 아닌 '모두의 성장' 전환"

李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미래성장동력에 투자 확대
청년·지방 더 많은 기회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청년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성장과 격차 완화를 함께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예산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주식 판 돈 다음날 받는다… 결제주기 T+1 전환

50년만에 'T+2 결제' 개편
오는 2028년 중 도입 목표
반대매매는 하루 빠른 T+2

앞으로 하루면 주식을 판 돈이 계좌에 들어온다. 〈관련기사 13면〉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내놨다. 목표 시점은 2028년 중이다. 1972년 'T(주식 거래 체결일)+2'일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의 개편이다.

지금은 월요일에 주식을 팔면 수요일에 돈이 들어온다. 'T+1'로 바뀌면 화요일에 들어온다. 사는 쪽은 돈을 하루 먼저 내야 한다.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미수거래 투자자는 미수금을 T+1일까지 갚아야 한다. 못 갚으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가 기존처럼 T+3일이 아니라 하루 빠른 'T+2'일에 일어난다. 증권사가 종목이나 수량을 잘못 입력해 체결된 거래를 바로잡는 신청 시한도 다음 날 오후 3시 30분에서 거래 당일 오후 8시 30분으로 당겨진다. 휴장일이 없는 경우 배당 일정도 달라진다. 주식을 산 다음 날 바로 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배당을 받으려면 지금은 기준일 이틀 전까지 사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일 하루 전에만 사면 된다.

시장 전체로는 결제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 거래는 끝났지만 돈과 주식이 아직 오가지 않은 상태로 남는 기간이 하루로 짧아져서다. 증권사가 이런 위험에 대비해 맡기는 증거금 부담도 덜게 된다. 2024년 5월 T+1로 바꾼 미국에선 청산소(NSCC)가 회원사에서 받는 청산기금이 전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23% 줄었다.

제도 도입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둔 것은 금융업계 전반의 시스템 개편과 외국인투자자의 시차·환전 부담을 고려해서다. 결제주기를 단축하려면 매매 확인부터 정정, 청산, 환전, 승인, 결제까지 이틀에 걸쳐 수행하던 10단계 이상의 업무를 하루 안에 처리해야 한다.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전산시스템과 업무절차를 바꿔야 한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메트로 한줄뉴스



▲與, 이르면 내일 의총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보고
▲박범계, '조국혁신당이 구명정' 유시민에 "권력투쟁적…분열 고착화될 수도"
▲박지원 "정청래, 前대표가 무슨 깃발 드나…백지장 맞들어야"
▲오세훈 "도심 마라톤 코스·일정 원점 재협의…시민 불편 줄일 것"
▲경찰, 김병기 보완수사 마무리…"공소청과 처리 방향 협의"
▲"뛰면 위험하잖아요" 학부모 한마디에…초등학교 계주 취소

/사진 뉴시스